

#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개선 방안 연구

이금지<sup>o</sup>, 전우천<sup>o</sup>  
 서울서신초등학교<sup>o</sup>,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mtopia@naver.com](mailto:mtopia@naver.com)<sup>o</sup> [wocjun@snue.ac.kr](mailto:wocjun@snue.ac.kr)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Informatization Education of the Disabled for Digital Divide Solution

Geum-ji Lee<sup>o</sup>, Woo-chun Chun  
 Dept. of Computer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요 약

우리나라는 범국가적인 정보화를 추진하여 지금 어느 국가보다도 발전된 정보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도 그에 적절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격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한 후 장애인들을 위해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보 접근성에서의 방법과 장애인 정보화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2007년 국가정보화지수가 3년 연속 3위로 발표되었다. 이는 스웨덴과 미국에 이은 것으로 2005년 이후 줄곧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세계1위로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반열에 올라있다.

이렇게 눈부신 정보화의 발전은 사회활동성이 적고 정보접근권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정보화는 육체적으로 근력이 요구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역할 축소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무기력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생활화는 사회적 접촉의 약화나 결여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정보화는 장애인과 일반 국민들 간의 정보격차 또는 정보 불평등이라

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보화 복지수준은 우리의 세계적 수준인 국가정보화지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말 기준,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은 70.7%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인 80.9%보다 10.2% 낮은 수준이다. 그 격차가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1]. 다음 <표 1>은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을 보여준다.

<표 1> 가구 컴퓨터 보급률[1]

| 구 분     | 가구 컴퓨터 보유율(%) |      |      |      |      |      |      | 전년 대비 증감폭 (%p) |
|---------|---------------|------|------|------|------|------|------|----------------|
|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
| 전체 국민   | 78.5          | 77.9 | 77.8 | 78.9 | 79.6 | 80.4 | 80.9 | 0.5 ↑          |
| 장애인     | 56.4          | 57.9 | 62.3 | 66.2 | 68.7 | 69.9 | 70.7 | 0.8 ↑          |
| 격차 (%p) | 22.1          | 20.0 | 15.5 | 12.7 | 10.9 | 10.5 | 10.2 | 0.3 ↓          |

또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재가 장애인 (만 7~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77.1%보다 25.3%나 낮은 수준이다. 다음 <표 2>는 인터넷 이용률을 보여 준다.

<표 2> 인터넷 이용률[1]

| 구분      | 인터넷 이용률(%) |      |      |      |      |      |      | 전년 대비 증감폭 (%p) |
|---------|------------|------|------|------|------|------|------|----------------|
|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
| 전체 국민   | 59.4       | 65.5 | 70.2 | 72.8 | 74.8 | 76.3 | 77.1 | 0.8↑           |
| 장애인     | 22.4       | 27.6 | 34.8 | 41.0 | 46.6 | 49.9 | 51.8 | 1.9↑           |
| 격차 (%p) | 37.0       | 37.9 | 35.4 | 31.8 | 28.2 | 26.4 | 25.3 | 1.1↓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 수준을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의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는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격차해소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보유율에 비해 컴퓨터 이용률이나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하드웨어의 보급에 의한 컴퓨터 보유율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 제고를 위한 특화된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받는 정보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사회에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 배양 및 직업 재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검색사이트 네이버-백과사전에서는 “정보화 사회(情報化社會)는 정보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활동이 활발하여 사회 및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 또한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 3조 2항에서는“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 이 두 가지 정의에 의해 정보화란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에서 정보가 응용되거나 적용되는 것을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는 학자의 주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1963년 일본인 학자 우메사오 다다오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니엘 벨 (Daniel Bell)은 정보화 사회를 기존의 산업 사회와 후기 산업 사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동우는 “정보화 사회란 사회내의 정보 유통량이 팽창함에 따라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의 고도화가 수반되어 정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로 의미를 설명하였다[4].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에 의하자면 1980년 ‘제 1의 물결 (농업혁명)’과 ‘제 2의 물결 (산업혁명)’에 이어 나타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제 3의 물결’로 정의하였다.

### 2.2. 정보화 사회의 낙관론과 비관론

정보화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 볼까는 긍정적인 시각의 낙관론과 부정적인 시각의 비관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낙관론의 시각을 살펴본다면 우지은의 연구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진전 되면서 정보통신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 보편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므로 기존의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으로 설명하였

다[5]. 즉,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한 원격 서비스, 이동 서비스, 가상공간 서비스 등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새로운 혜택이 제공되고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보다 평등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우의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낙관론적 입장은 새로운 정보 기술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제시하였다[6]. 종합하여 보면 신기술의 적용으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정보 서비스와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고 결국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청각 장애인은 전화 통화를 대신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문자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시각 장애인은 컴퓨터가 책을 음성이나 점자로 출력하여 직접 독서를 할 수 있다. 결국 기술이 혁신에 의한 기술결정론의 영향으로 정보화 사회는 낙관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사이버 범죄의 등장, 감시와 개인 정보의 유출, 기득권 세력의 정보 독점과 정보 불평등 형성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벨 (Daniel Bell)이 제시하였던 후기 산업사회의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러 (Shiller)는 “정보의 가치가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 자원으로서의 정보는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와 역사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 낙관론을 비판하였고, [6]의 연구에서는 “기술의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또한 자본 등에 의해서 정보 격차는 더 심화되어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것”으로 정보화 사회를 비관론적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도 정보 권력을 독점하는 기득권 세력이 존재하며 정보 불평등 상태에 놓은 사람들은 제한된 일부의 정보서비스만을 이용하게 되면서 정보 불평등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보화 사회는 기존 산업사회와는 단절된 새로운 세계로 정보 기술 혜택을 모두

가 누릴 것이라는 낙관론과 기존 산업사회에서 분기된 정보화 사회로 기존 사회문제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비관론에 대해서 논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정보화 사회에서 원격이나 가상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의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 학력, 직업, 소득 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경우 그러한 혜택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장애인은 정보화 사회에서도 분리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 2.3. 정보격차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서는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7].

조주은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Digital Divide를 번역한 용어가 정보격차이며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정보격차가 생산의 차이, 소득의 차이, 소비의 차이, 권력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의 빈부격차 또는 사회 양극화로 재생산한다고 보는 것이다[8].

정보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의 관계를 통해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우지은의 연구[5]에서는 “정보격차 혹은 정보 불평등의 원인은 정보에 대한 비용지불 능력, 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 정보 추구 동기 등 3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여건마련의 정도에 따라 정보화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은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주은은 ‘정보격차’의 원인은 개인적 차

원이고, '정보 불평등'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9].

이렇듯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은 학자의 주장에 따라 그 원인과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관계 역시도 매우 다양하다. 즉, 그 관계가 비슷하거나 분리되는 형태로 쓰이기도 하며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정보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연결 단계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의미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 2.4. 장애인의 정보격차

조주은의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수준을 비교하고 그 격차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PC와 인터넷 사용 여부'를 정보 접근성의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 접근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격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도 사회 경제적 영향에 따라 정보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장애인이 사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9].

이동우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미디어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 간의 정보격차의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알게 되는 인지적 정보와 컴퓨터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인위적 노력으로 알게 되는 활용적 정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모, 직장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정보(인터넷 인지도)는 인터넷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설명보다는 시간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게 접하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용적 정보(Computer Literacy)는 인지적 정보와는 다르게 그 어떤 요인보다도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결국 인지적 정보와 활용적 정보는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보다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정보격차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

서론에서도 언급한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의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는 접근, 역량, 활용(양적, 질적)등의 부문적 격차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의 개량 지표를 사용하였다. 특히 접근 격차지수는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 수준의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세부 속성으로 정보통신기기 보유 정도, PC기종, 인터넷 접속 속도, 필요시 인터넷·컴퓨터 접근 가능 정도를 포함하였고, 양적 활용 격차 지수는 컴퓨터·인터넷의 양적사용 수준의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컴퓨터·인터넷 이용률 및 사용시간들을 포함하였고, 질적 활용 격차지수는 컴퓨터·인터넷 사용의 질로서 질적 사용 수준의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업무(학업)·가사·여가·사회활동·의사소통 및 대인 관계 형성 등 일상생활에서 부분별 도움정도, 세부 권장 용도별 이용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다음 <표 3>은 부분별 격차지수 및 대비수준을 나타낸다.

<표 3> 부문별 격차지수(점) 및 대비수준(%)

| 구분    | 2004년 |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
|-------|-------|------|-------|------|-------|------|-------|------|-------|------|
|       | 격차지수  | 대비수준 | 격차지수  | 대비수준 | 격차지수  | 대비수준 | 격차지수  | 대비수준 | 격차지수  | 대비수준 |
| 접근    | 27.0  | 73.0 | 22.4  | 77.6 | 14.6  | 85.4 | 11.2  | 88.8 | 7.4   | 92.6 |
| 역량    | 58.9  | 41.1 | 50.0  | 50.0 | 39.0  | 61.0 | 36.6  | 63.4 | 34.0  | 66.0 |
| 양적 활용 | 51.1  | 48.9 | 41.4  | 58.6 | 32.2  | 67.8 | 31.9  | 68.1 | 29.5  | 70.5 |
| 질적 활용 | 54.5  | 45.5 | 46.9  | 53.1 | 38.0  | 62.0 | 36.7  | 63.3 | 35.5  | 64.5 |
| 총합    | 42.5  | 57.5 | 34.8  | 65.2 | 26.1  | 73.9 | 24.0  | 76.0 | 21.2  | 78.8 |

이에 따른 조사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연령 장애인의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분석에서 50대, 60대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39.3%, 18.0%로 전체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77.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전체 평균 (41.7%)보다도 낮게 나타나 매우 낮은 편이다. <표 4>는 장애인 연령대별 정보화 수준을 나타낸다.

<표 4> 장애인 연령대별 정보화 수준 (%)

| 구 분    | 종합    | 접근    | 역량    | 활용    |
|--------|-------|-------|-------|-------|
| 40대 이하 | 103.1 | 103.7 | 101.3 | 102.9 |
| 50대    | 67.1  | 89.4  | 45.8  | 51.1  |
| 60대 이상 | 45.4  | 75.2  | 20.5  | 23.2  |
| 평균     | 78.8  | 92.6  | 66.0  | 68.8  |

종합하여보면, 정보격차의 요인은 주로 인구나사회학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정보격차의 조사연구 및 분석은 주로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는 장애인 누구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정보 활용성 차원에서는 장애인 누구나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피교육자 중심의 균등한 정보화교육 기회 제공 및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3.1. 정보 접근성의 차원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비는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필요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정보통신 접근성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엔지니어 및 기업

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2007년 웹 접근성 표준화 현황의 조사를 볼 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웹 개발자들에게만 26%에서 84%상승되었고 실제 접근성은 2006년 세계전자정부 평가 결과 웹 접근성 준수율은 세계에서 43위로 15%에 불과하다. 2004년과 2005년에 실시한 휴대기기의 접근성 평가에서는 전맹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04년에 실시한 소프트웨어 접근성 평가에서도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입 소프트웨어에 비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고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접근성 준수 우수 제품 소개 및 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인식부족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접근성 제고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관련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연수토록 하고, 국내 IT 관련 학과에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자재,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교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접근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2. 정보 활용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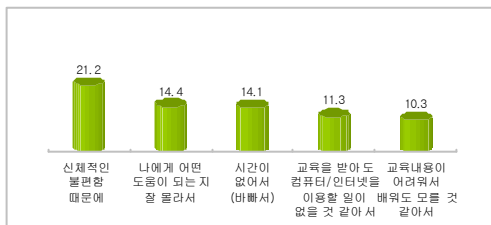
##### 1)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전용 정보화교육장에서의 집합교육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집합교육은 장애인 기관에 교육기자재와 교육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2002년 말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정으로 방문

하여 교육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의 컴퓨터·인터넷 관련 정보화 교육 수강 경험률은 26.9%로 나타났다.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자 기준으로 정보화교육 이전 대비 이후에 부문별 변화정도 분석결과를 보면 정보화교육이 장애인의 'PC·인터넷 이용률 제고', 'PC·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PC·인터넷 이용능력 제고', '일상생활 편리성 향상',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의향 증가',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 장애인의 84.7%가 '정보화교육이 계기가 되어 PC·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83.8%가 'PC·인터넷 이용시간이 정보화교육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보화교육의 비수강 주 이유로는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21.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정보화교육 비수강 주 이유 (%)

또한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자 기준, 정부지원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은 80.7%로 나타나 정보 지원에 의한 정보화 교육이 다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의 수강 경험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타 사업에 비해 의존도가 높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방문교육의 취약 지역 및 취약 장애 유형인 중소도시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정보화교육을 수강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선 방문교육이 필수적이며 방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이 절실하다.

비수강 이유 중의 하나인 '교육내용이 어려워서 배워도 모를 것 같아서'이다. 그러므로 셋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교육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내용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비장애인과 대상 정보화교육과 다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 및 교육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콘텐츠 개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가 보급되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보화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는 개별 기관(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일반영리업자 등)들이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적인 수준이며 장애인들이 실제 사회 참여를 위한 재화에 필요한 특화된 콘텐츠는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포털사이트도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장애인 재화에 필수적인 특화된 정보들을 개발하고, 동시에 여러 곳에 분산된 장애인 사이트를 연계하여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이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 정보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 제정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발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을 시급히 제정하여 보급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장애인 정보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수요조사 및 발굴, 관련 연구수행, 기술개발기관 지원, 사후관리 및 상용화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및 향후과제

일반인에게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정보통신기구나 서비스는 이제 없어서 안 되는 일상생활의 수단이 되고 있다. 잃어버린 감각과 기능을 대신하는 수단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회의 참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보화기기와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도 집 안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다. 정보화 사회의 낙관론적 관점처럼 기술의 진보가 진전되면서 정보통신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 보편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 장애인에게 더 이상 신체적 불편이 약점으로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접근환경 구축, 정보화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 제정 등 많은 영역에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기관 간 그리고 각 부처 간 역할 분담, 민간사업자와 민간비영리 단체의 역할 등 각계 각 층의 역할을 설정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참고문헌

[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08.  
 [2] 위키 백과, (2009년 12월 20일 검색)정보화 사회 [wikipedia.org/wiki/%EC%A0%95%B3%B4%ED%99%94\\_%EC%82%AC%ED9](http://wikipedia.org/wiki/%EC%A0%95%B3%B4%ED%99%94_%EC%82%AC%ED9)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2009.05.22 법률 제9705호]  
 [4] 전석호, “정보사회와 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87.  
 [5] 우지은, “지역 간 정보격차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2003.  
 [6] 이동우, “정보격차의 발생변인 연구 : 정보격차의 인지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7] 제 4차 (타)일부개정 2009.2.29 법률 제 8852호  
 [8] 이종순, “정보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 : 농촌과 도시간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9] 조주은, “장애인 정보 접근성에 관한 연구 : 요인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2002.